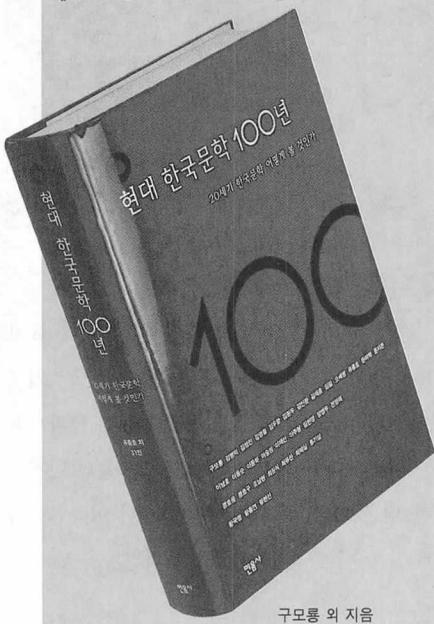


한국문학 100년사의 전경 담아 일부 논문 사실정리 차원에 머물러

『현대 한국문학 100년』



구모룡 외 지음
민음사/A5신/760면/18,000원

심포지엄의 발표문과 토론문을 엮은 책은 여행으로 치자면 패키지 상품과도 같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볼거리를 조목조목 제시해주고 친절하게 해설과 평가까지 덧붙여주기 때문이다. 패키지 상품의 장점은 압축과 기획력, 경제성에 있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방식은 다양성의 이면에 도식성과 피상성의 위험을 안고 있다. 20세기를 마감하며 대산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현대 한국문학 100년』의 성과물을 모은 이 책 역시 이런 면주에 듈다.

이 책에는 20세기의 중요한 문학 쟁점 8개에 관한 16편의 논문과 16편의 질의문이 실려 있다. 7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은 일단 두께면에서 압도적이거나와, 한 자리에서 한국 현대문학 100년의 전경(全景)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각 주제별로 심화된 두편의 논문과 날카로운 토론문은 한국문학의 쟁점과 해결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하지만 몇몇 논문들은 발전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의 정리 차원에 머물러 아쉬움을 준다. 다뤄야 할 주제가 광범위한 탓도 있지만, 세부 주제의 안배가 정밀하지 못해 논의가 일부 겹친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주제의 넓이와

깊이를 아우르는 힘은 역시 연구자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1장에서 조남현은 방대한 1차 자료를 꼼꼼히 섭렵하면서 개화기 소설과 작가의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한다. 현대문학 연구에 서 자료의 특성상 환영받지 못한 개화기를 심층 탐구한 성실성이 돋보인다. 역사소설을 다룬 2장에서 이재선은 역사소설의 특성과 유형, 현대 역사소설의 성취와 한계를 논하며, 이주형은 작품 중심의 접근을 시도한다. 역사성과 문학성의 길항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작가의 개입 정도와 주인공의 성격 등이 흥미롭게 논의됐다.

3장 황현산의 <모국어와 시간의 깊이>는 보편적 언어의 성취와 언어의 모험이라는 관점에서 한용운·이상·서정주·김수영의 시를 다룬다. 토론자 황국명에게 적잖은 비판을 받지만, 네 시인에 대한 황현산의 독특한 관점은 우리 시를 보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 4장 자연에 관한 논의는 토론자 정효구에 의해 풍부함을 얻는다. 생태시 문제와 관련해 정효구는 자연의 본질을 투쟁과 갈등이 빠진 사랑과 화해의 세계로만 이해하는 시각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5장과 6장은 한국 현대사의 특성상 분리될 수 없었던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을 탐구한다. 이 부분은 7장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논의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 중 김인환과 김 철, 최원식의 글은 뜨거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김지하를 ‘파시즘에 저항한 파시스트’로 본 김 철의 글은 20세기 한국문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언의 하나로 기억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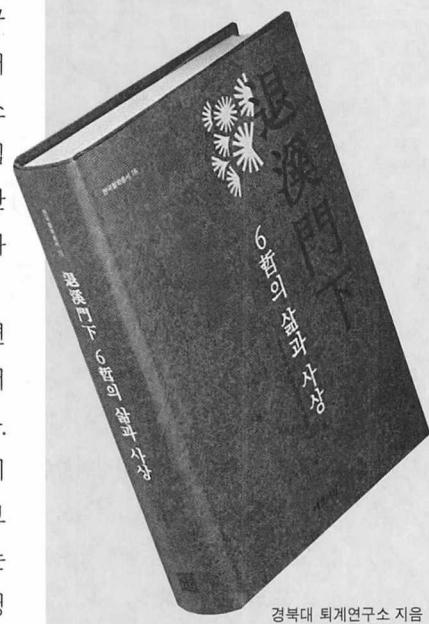
문학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마무리된 이 책은 한국 현대문학을 관통하는 거시적인 성과임에 분명하다.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근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독해 봐야 할 책이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논문 『서정주 시의 변천과정 연구』 『타자와 만나는 두 가지 방식』 외.

퇴계학맥의 흐름과 전개 집대성 퇴계학의 학문범위 확대에 기여

『퇴계문화 6첩의 삶과 사상』



경북대 퇴계연구소 지음
예문서원/A5신/732면/28,000원

퇴계학은 오늘날 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퇴계학파는 그의 향리인 예안·안동지역 중심으로 성립되고 퇴계의 학문적 명성과 위상에 걸맞게 전국적 분포를 이룬다. 더구나 1970년대부터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의 공용어는 우리 한국어를 사용한다.

오늘날 일본의 윤리의식은 거의가 퇴계사상에 기초해 형성됐다. 에도(江戸)시대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闡齋)가 퇴계의 『자성록(自省錄)』을 읽고 자신의 학문 방향을 자득한 아래 퇴계는 일본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아 메이지(明治)시대의 교육방침 확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 탐구·인간수양을 중히 여기는 오오츠카파(大塚派)에서도 퇴계의 저술이 수택본(手澤本)으로 나오고 16세기 중반, 활자로 간행된다.

이들은 인격도야·인간형성을 근지에 둔 도학(道學)을 창도해 자성과 성찰, 그리고 체찰(體察)을 통해 마음속 존엄한 생명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것이 우주의 생명력과 연결됨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존속·함양하는 퇴계학을 계승했다.

또한 당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본떠 퇴계의 서한(書翰)을 정선한 『이퇴계서초(李退溪書抄)』가 출판되고, 1980년대 말 중국에서는

장리원(張立文)의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가 발간되기도 했다. 유학에서 도학이라 함은 인생의 도를 핵심으로 삼는 인도학(人道學)이다. 오늘날 사상이 동양으로 깊이를 더해 가는 경향은 소위 아시아적 가치가 일본주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과학 역시 인간과 단절되면 그 존재 이유나 생명을 잃고 만다.

공자, 주자, 그리고 퇴계의 위대함은 사학(私學)을 열어 문하생을 많이 둔 교육자의 면모에 있다. 이 책은 퇴계의 학문정신과 퇴계학의 주요 이론을 학문적 바탕으로 계승한 여섯 제자에 관한 논문과 함께 퇴계 문하를 계보화한 글과 퇴계 문인의 사승(師承)관계를 도표화해 소개한다.

월천 조목의 주자학적 심학, 학봉 김성일의 예학, 간재 이덕홍의 성리학, 서애 유성룡의 철학, 한강 정구의 예학, 지산 조호익의 예학 등을 다룬 논문들은 퇴계의 성학(聖學)을 시대적 관심에 따라 예학(禮學)정신으로 계승한 이론을 분석한다. 또한 옛날 선비들의 학문에 따라 퇴계 문하 6哲(六哲)의 문학세계·정치사상·역사의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다시 말해 퇴계 문하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학통 제자를 중심으로 퇴계에서 시작된 학맥의 흐름과 전개라는 차원에서 퇴계학 자체에 내포된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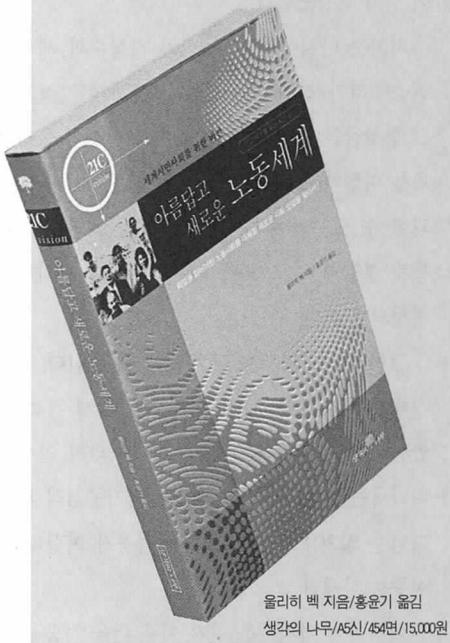
퇴계 제자의 범위는 많게는 4백여명이요, 적어도 42명으로 정한다. 그 가운데 조목은 공문(孔門)의 안자(顏子)에 비유되는 제자요, 김성일은 탁월한 예학가였으며, 이덕홍은 학문을 현실에 적응시킨 학자며, 유성룡은 퇴계학과 실학의 교량적 역할을 한 경제가였으며, 정구는 퇴계의 학맥 속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만든 철학자요, 조호익은 독서궁리로 삶을 살아간 유학자로 소개한다. 따라서 이 책은 퇴계학이 어떻게 심학·발전하는가를 퇴계학파라는 거대한 학문적 계보를 추적하면서 그 구체적인 학통을 분석·검토하는 작업의 성과물로서 퇴계학의 학문적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서경요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저서 『조선유교지성사』 외.

서평

현실사회에 대한 논쟁적 문제제기 ‘시민노동모델’ 대안으로 제시해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울리히 벽 지음/홍윤기 옮김
생각의 나무/A5판/454면/15,000원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는 혼돈과 절망, 불안정성에 빠진 지구화시대의 사회, 즉 ‘노동사회’로 불리는 ‘제1차 현대’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상기획이다. 그런 만큼 그것은 ‘아름답고’ ‘새롭기’ 보다는 고통스런 현실사회에 대한 ‘도전적’이고 ‘논쟁적’ 인 문제제기다. 20대80의 사회, 실업과 불완전고용, 그리고 빈곤이 일상화된 현실세계를 낙관적인 미래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벽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 ‘신자유주의’ ‘정보화’ ‘생태문제’ 등은 집단적 생활모형, 국민국가와 사회국가, 자연력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 이른바 ‘제1차 현대’ 사회의 종지부를 찍는 변동이다. 더불어 완전고용과 ‘취업노동’ 중심의 사회관계, 신조합주의적 계급타협, 기업중심적 노동생산, 사회보험체계, 남녀 성별 노동분업 등으로 구성된 ‘노동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세계사적 변동은 무엇보다 ‘1차 현대’ 내부에서 작동했던 ‘반사적 현대화’(성찰적 근대화)의 진전으로 추동됐다고 한다.

이런 추론의 당연한 귀결은 과거의 유토피아로 회귀하고자 하는 정치적·이론적 시도들이

완전히 무방하다는 진단이다. ‘완전고용’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남성 중심의 안락한 가정’ ‘국민국가와 일국 내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같은 시도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것은 방향착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벽이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모델, 즉 ‘시민노동모델’이다.

‘시민노동’은 자본주의적 취업노동의 요소와 공공복리적 노동의 요소가 결합된 노동모델이다. 공공복리적 노동은 과거 노동사회에서는 거의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노동의 기축을 이루게 된다. 예컨대 육아노동과 가사노동, 공동체적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정치활동 등 모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시민활동이 모두 이 시민노동으로 포착된다. 이때 기존 취업노동의 노동시간은 극적으로 단축돼 재분배돼야 하며, 시민들은 전일제 취업노동과 시민노동 양자에 동시적으로 참여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민노동은 자본의 전지구화, 개인주의화로 위협받게 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자율적으로 결정된 앙가주망의 개인주의로 소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과거의 자연적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시도 대신에 세계시민의 정치적 공동체를 창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몇 년간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사회의 한 쪽에서는 실업자, 노숙자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가혹한 시련을 경험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금리생활자와 주식투기자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구의 ‘노동사회’ 전망과 정부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망’ 외에 다른 출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노동모델’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언제나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되새겨 볼 수밖에 없다.

노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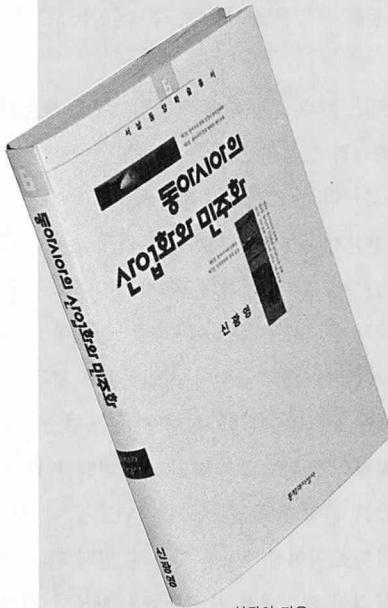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공저) 외.

서평

19

동아시아 발전요소 분석한 역저 '아시아적 가치' 허구성 파헤쳐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신광영 지음

문화과지성사/A5신/312면/12,000원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국내 사회과학계의 본격 분석서를 찾을 수 없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신교수의 저서는 일단 이런 아쉬움을 불식하기에 족하다. 사실 동아시아의 주인은 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적같은 경제성장과 권위주의로부터의 민주화 현상에 대한 주요 학술 연구는 미국학계가 주도해왔다. 그리고 우리 학계는 대개 그들의 연구를 따라가거나 소개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의 의미가 사소하지 않다.

1997~98년, 이른바 '아시아의 위기'가 발생하자 많은 연구자와 관측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당혹감은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나 친사로 일관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한결같았다. 이런 당혹감 역시 그간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체험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없이 그저 친사나 비판의 대열에 합류해 앵무새같은 행태를 보인 탓에서 비롯됐던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제위기가 격화돼 급기야 IMF신탁통치로 간 이후에 겨우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정말 '사회과학의 위기' 정후가 아닌가 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아시아적 가치니 신국가주의론이니 하는 희한한 개념이나 입장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연구자들이 학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그 목소리가 호응을 얻는 점이 심히 걱정스럽다.

저자는 아시아적 가치, 국가 지상주의, 세계화 만능주의가 신화라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그 환상을 깨고자 한다. 세계화 현상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한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997~98년 위기를 통해 절감한 바고, 나름대로의 비판적 합의마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의는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김대중정부도 실제 정책 입안이나 집행에서는 여전히 국가주의적 자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한번 정착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을 떨쳐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위기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자의 인식대로 '수구반동'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민주화, 시장의 개혁, 시민사회 진전을 통해 균대를 완수해야 할 협력에 놓여 있으며, 아시아적 가치론은 사회적 관심을 이런 줄기로부터 일탈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신화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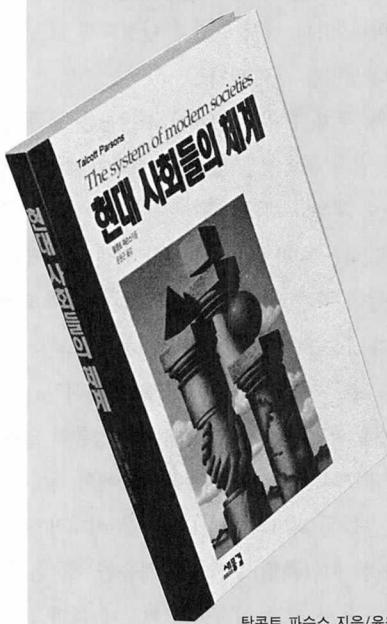
이 책은 또한 기존의 주류 동아시아 발전론이 내놓은 동아시아 지역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 비교학적 분석의 결여, 거시적 관점의 부재, 폐편적 사회과학 등이 사회과학의 위기를 빚어내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인식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데, 이는 매우 온당한 대안적 인식론이라고 하겠다.

이수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세계체제론』 『세계체제의 인간화』 외.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현대사회론 현대사회의 변동과정 검토해

『현대 사회들의 체계』



탈코트 파슨스 지음/윤원근 옮김
새물결/A5변형/246면/15,000원

지칠 줄 모르고 마냥 유행만 뒤따르는 우리 사회(과)학계에 파슨스의 『현대 사회들의 체계』가 번역됐다는 사실은 분명 기이하다. 이토록 경박한 풍토에서는 차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젊은 학자의 집요한 결의와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출판사의 안목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이 일은 완전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파슨스는 한평생 사회이론과 씨름하며 변덕부리는 세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한 청교도 같은 학자였다. 이론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도 그를 피하거나 우회하지 못하고 부딪치게 될 거대한 사회학자다. 그의 이론을 제쳐 두고 마르크스·베버·뒤르켐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이론의 연속성을 놓치게 되며, 그를 모른 채 오늘의 사회학자들을 들먹인다면 이론의 편벽성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파슨스는 사회학 이론의 한 이정표다.

이 책은 1966년에 나온 『사회적 유형』(이종수 옮김)의 후편으로, 얇지만 그의 주요 생각이 집약된 장중한 저작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다듬어 놓은 이론의 틀로 오랫동안 관심을 쏟아왔던 현대사회의 속성과 형성과정 그리고 변동의 추세를 '거대한 비교'의 눈으로 분석한다. 마치 배

버의 비교종교 사회학과도 같이 현대사회가 문명의 긴 '진화' 과정을 밟아 오면서 시대를 긋는 '적응능력'을 제도화해 온 변동의 과정을 겸토 한다.

현대사회는 그 '못자리'가 된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이루어낸 문화의 혁신이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를 통해 중세와 종교개혁기,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제도화됐다. 현대사회 체계는 17세기부터 두드러졌다. 종교개혁 이후 서구는 이전에 비해 종교, 정부, 경제, 사회 공동체가 더욱 분명하게 '분화' 되기 시작했다.

영국이 좋은 보기다. '용해' 돼 있던 종교와 정부가 '분화'되면서 그간 제외됐던 비국교도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합질서를 제도화했다. 법률제도와 의회제도를 만들어 시민권을 제도화하고 '미분화' 된 귀속구조를 허물었다. 세속영역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고 철학, 과학 등 세속 영역에서 합리화의 정도를 더해 갈 수 있게 된 점도 이런 분화를 촉진시킨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영향이었다.

'최초의 신생 국가' 미국은 이런 변동의 선도국이 됐다. 지역이나 인종 또는 종교나 계급에 따라 뭉치기보다는 이익집단으로 묶혀진 다원결사체의 구조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고, 귀속신분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가치에 따라 사회 공동체에 '포함'되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가치는 이런 분화된 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높은 '포함'의 수준에서 조절됐다.

현대 사회체계를 균형되게 인식하는 한, 어설픈 낙관론도 또 설득론 비관론도 적절치 않다. 모두가 변혁의 긴 도정에 올라서 있을 뿐이다. 사회 이론가는 이 현상을 차분히 풀이할 수 있는 절제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옮긴이가 덧붙인 '후기'는 마구 떠벌리는 무절제한 논자들에게 이 절제를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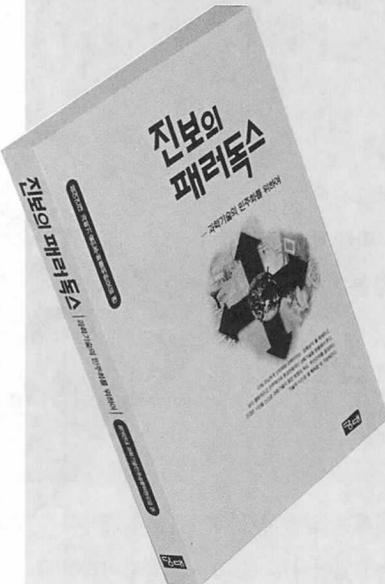
박영신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 외.

서평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 당위성 강조 과학기술의 민주화 문제 총정리해

『진보의 패러독스』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모임 편
당대/A5신/400면/12,000원

새 천년을 맞은 인류의 앞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 난제들은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다. 과학기술의 오늘을 비판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책이 세기가 바뀌는 때 나온 것은 뜻깊은 일이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진보의 패러독스』는 2년 전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모임' (대표 김환석, 이하 과민모)을 만들어 활동해 온 사람들의 글 모음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이 엘리트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도 1970년대에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책으로 소개된 것은 나카야마의 『과학과 사회의 현대사』(풀빛, 1982)와 조홍섭이 편역한 『과학기술과 인간해방』(한길사, 1984)이 처음이었다. 거의 20년만에 국내학자들이 쓴 수준높은 논문이 책으로 엮인 것이 반갑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 민주화에 관한 이론을 다룬 제1부는 책 전체를 요약한 김환석의 서론에서 시작한다. 김동광의 『과학대중화』는 대중의 과학 이해에 관한 참신한 시각을 소개한다. 송성수의 『과학전쟁』은 과학

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을 잘 정리한다. 스클로브와 브라이언의 글은 민주적 기술의 설계, 대안기술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제2부는 과학기술 민주화의 주요문제를 제시한 각론이다. 박병상은 뜨거운 이슈인 생명공학의 위험을 경고하며 대안을 내놓았고, 이은경은 과학을 폐미니즘의 시각에서 새롭게 본다. 한재각은 과학기술을 인권문제와 관련시켰으며, 최경희는 STS(과학기술과 사회)를 통한 과학교육의 개혁을 역설한다. 그리고 김명진은 영화를 보기로 해 과학기술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문제삼는다.

제3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파고 든 글들이다. 이영희는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한 홀륭한 논문을 내놓는다. 김환석의 글은 그 자신이 주도한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유네스코 합의회의 보고서다. 이혜경은 과민모가 참여한 생명공학 감시운동의 전말을 자세히 적고, 김병윤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과학상점' 운동을 소개한다.

부록에 실린 라투르의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좌파정치〉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진보정치와 연결한 흥미있는 내용이다. 맨끝에 실린 과민모의 활동연보에서 과학기술 민주화의 문제를 총정리할 수 있다.

전체로 보아 잘 짜여진 책이다. 글의 수준도 비교적 고르며 어려운 내용이 잘 풀이돼 있다. 국내에 번역된 문헌에 빠진 것(머튼 등)이 있고 이름이 바뀌었다든가(오가타 사다코) 표기(페이어차벤드) 등에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재판 때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30년 전 과학기술 비판의 불을 지핀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감회를 안고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과학관련 강의에서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 뒤잇는 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린다.

송상용

한림대 사학과 교수. 저서 『서양과학의 흐름』 『과학사』(공저) 외.